
교육부 업무보고

-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, 대체불가 인재강국 -

2026. 8. 5.

I. 지시사항 및 외부 반복 지적사항 추진상황

1 지시사항 추진상황

- ◆ 총 177건(추진과제 66건/훈시사항 111건) 및 과제 완료율 약 85%(7.8.기준)
- ◆ 추진 중인 지시사항 총 10건(1개월 내 3건, 3개월 내 3건, 연내 4건)

※ 완료과제 제외

연번	지시사항	추진현황 및 향후계획	완료시기
1	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(‘25.11.4.) - 국민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안 마련 후 국민 의견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	○(현황) 교육청·학교 의견수렴(‘25.10.), 설문조사(‘25.11.) - TF 간담회(4.10.) 및 국회 토론회(5.13.) 개최 - 해외사례 취재 영상 제작(EBS 협업, 6월 유튜브 탑재) ○(계획) 관계기관 및 국회와 협력, 사회적 속의 및 공론화를 거쳐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	‘26.下
2	서울대병원 업무 이관 (‘25.12.12.) - 국립대병원 업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제외되는 사유와 향후 계획을 보고할 것	○(현황) 국회 입법 추진 및 서울대병원 의견 수렴 - 교육위 법안소위 상정(3.23.), 서울대병원 이사장, 병원장 등 현장 소통(‘26.2.~6. 4회) - 병원장 임명(5.13.) 및 이관 추진 지속 협의 ○(계획) 「서울대학교(치과)병원 설치법」 개정(‘26.下) - 서울대병원 구성원 대상 설명회(7월 중), 국회 교육위 위원 대상 이관 필요성 설명(7~8월)	‘26.下
3	과학기술 인재확보 주요 과제 추진(‘26.2.19.) - 주요과제를 보고한 대로 차질없이 이행할 것	○(현황) 과학기술·AI 인재양성 관련 범부처 협력 - 교육부·과기부 인재정책 온담회(장관급), AI 인재양성 협력TF(차관급)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 ○(계획)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·지원 기본계획」 발표(과기부 주관)	‘26.8월
4	학교 한자교육 방안 검토 (‘26.4.28.) - 학생들의 문해력 제고 차원에서 학교 한자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 등을 거쳐 검토할 것	○(현황) 현황 조사(5.29.), 관계기관* 의견 수렴(6.4.~5.) * 국가교육위원회(주관기관), 교육부, 시도교육청 - ‘26. 한자교육 실시학교* 비율(%) : (초)86.9 / 한문(선택) 과목 개설학교 비율(%) : (중)76.6, (고)80 * 교과, 창의적체험활동, 방과후과정 등 포함 ○(계획) 교육부 현황조사 결과 등을 반영, 국교위 문해력 특위에서 한자교육 강화 방안 검토(11월)	‘26.11월
5	학교 헌법교육 강화 (‘26.4.28.) - 헌법교육에 민주주의·인권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되, 교육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	○(현황) 헌법 가치 기반 민주시민교육 콘텐츠* 개발· 배포,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전문강사 헌법교육(법무부) 및 교사 연수(법제처) 실시 * 민주시민교육 관련 영상·홍보자료 등 현장 보급·확산 ○(계획) 토의·토론형 헌법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·배포(7월) 및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개통(9월~)	‘26.8월

※ 완료과제 제외

연번	지시사항	추진현황 및 향후계획	완료시기
6	교사 권리 보호 강화 (‘26.4.28.) -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	○(현황)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(1.22),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처리 절차 개선 협의* * 「아동학대처벌법」 개정 관련 법무부 협의(5.8.), 「아동복지법」 개정 관련 복지부 협의(6.5.), 관련 전문가 협의(5.26.) ○(계획) 교사 다중 보호 체계 구축(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, 5.28.)을 위한 국가책임 법률대응 현장 안착, 「아동학대처벌법」 개정 관계부처 합의안 마련	‘26.下
7	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지속 점검 (‘26.5.12.) -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지속 점검할 것	○(현황) 실태점검 추진계획 수립(5.28.) 및 시행(6.5.~) ※ 대상 : 교육부, 시도교육청, 소속·산하 공공기관 ○(계획) 실태 종합 확인*(~7.10.) 및 결과 회신(7.16.) * 기관별 자체 점검 및 교육부 점검 결과 취합 분석 - 관리 미흡 대상 교육부·개인정보위 합동점검(‘26.8.~)	‘26.8월
8	벨기에 동포간담회(6.9.)에서 동포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할 것 (‘26.6.25.)	○(현황) 교육부 소관 건의사항* 2건 답변 제출 완료 * 정부 차원에서 국내 인성교육 강화 요청 ○(계획) 재외동포청(주관)에서 공관을 통해 답변* 예정 * 제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발표(‘26~’30) 등 AI시대 요구되는 인성 역량 함양	‘26.7월
9	이탈리아 동포간담회(6.15.)에서 동포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할 것 (‘26.6.25.)	○(현황) 교육부 소관 건의사항* 1건 답변 제출 완료 * 이탈리아 내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 지원 요청 ○(계획) 재외동포청(주관)에서 공관을 통해 답변* 예정 * 이탈리아 내 한국어교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(‘25. 이탈리아 내 1개교 방과후과정 운영, 50명 수강 중)	‘26.7월
10	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 공개 토론회 (‘26.6.30.) - 재정전략회의 전 핵심 쟁점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반영할 것	○(현황) 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수립(~7.6.) ○(계획)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개최(7.8.) (참석자) 교육부기획처 장관, 교육재정 전문가, 현장 관계자 등 (공개 방식) KTV 및 교육부·기획처 유튜브 채널 생중계	‘26.7월

2 외부 반복 지적사항 추진상황

연번	지적사항	연도	현황 및 조치계획	완료시기
① 국정감사 반복 지적사항				
1	교권침해 대응 필요	2022 2023 2024 2025	○(현황) 교권 보호방안 발표, 후속조치 추진(‘26.1.~) < 방안 주요 내용 > ▲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▲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 현장 안착 ▲ 지역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확대 운영 ▲ 안전한 학교 환경 및 교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○(계획) 학교민원 대응체계 안착 및 교사 보호 장치 등 추가대책 마련 → 학교 ‘민원대응팀’과 관할청 ‘학교민원대응지원팀’ 법제화(10.29. 시행), 학교장의 퇴거 요청, 일시적 출입제한 등 조치 규정(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)	계속

연번	지적사항	연도	현황 및 조치계획	완료시기
2	교육 정치적 중립	2021	○(현황)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의한 교실의 정치화 등 우려·오해 존재 ○(계획) 사회적 공감대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의제 속의 공론화	'26.12월
3	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	2021 2022 2025	○(현황) 고등교육 재정 확충 요구 지속 ※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(\$14,695), OECD(\$21,444) 대비 68.5% 수준('25. 발표) -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('23) * ('23) 9조 7,427억원 → ('24) 15조 5,338억원 → ('25) 16조 1,048억원 → ('26) 17조 595억원(국가장학금 5.1조원) -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('25.12./고특회계법 개정) ※ 회계 연장(~'30년) 및 국세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의 세입 재원 확보 등 ○(계획) 재정당국 협의, 재정 확충 지속 노력	계속
4	강화된 학교폭력 대책 (SPO 확충 등) 필요	2021 2023 2025	○(현황) SPO 정원은 1,127명, 학교 수는 12,233교로 1인당 10.9교 담당('25. 기준) - 경찰청은 '26년부터 3년간 1인당 10교를 목표(96명 순증(연 32명씩 순증))로 행안부에 증원 요청 중 - 미반영시, 경찰청은 도박·스토킹 등 기존 범죄 대응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 ○(계획) SPO 증원을 위한 지속 협의 추진	'26.8월
5	유학생 질 관리 강화 필요	2022 2023 2024 2025	○(현황)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 등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중 ○(계획) 한국어능력기준 상향, 해외학위 검증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인증제 개편방안 발표('26.下)	'26.12월
6	이주배경학생 지원 필요	2022 2024 2025	○(현황) 이주배경학생* 증가에 따른 지원 필요 * ('12) 46,954명(0.7%) → ('25) 202,208명(4.0%) -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,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('25. 162억원 → '26. 366억원) ○(계획) 「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」 제정('26.4.15. 발의) 및 행·재정적 지원 지속	'26.12월
7	직업계고 현장실습 대책 필요	2021 2024 2025	○(현황)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확보 및 학생 권익침해 예방 요구 지속 - 매뉴얼 개정, 설명회, 학교전담노무사, 현장실습 컨설턴트, 부처 합동점검* 등 제도 시행 중 * ('23.) 37교 → ('24.) 40교 → ('25.) 80개(학교 56, 산업체 24) ○(계획) 개선방안 현장 안착 지속 지원	'27.2월 (학년도 단위 추진)

연번	지적사항	연도	현황 및 조치계획	완료시기
② 언론 반복 지적사항				
1	소규모학교 고교학점제 시행 여건 강화	2026	○(현황) 개설 과목 부족으로 학생의 이수 기회 제한 - 정규 교원 추가 배치('26. 777명) 및 강사 채용 지원('26. 157억 원)으로 과목 개설 여건 개선 - 공동교육과정(2,987개), 온라인학교 과목(1,138개), 고교-대학 연계 과목(97개) 등 다양한 이수 기회 제공 ○(계획)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- 온라인학교 개방·확대(시·도 → 전국 수강), 대학 연계 소규모학교 특화 프로그램* 지원 * 예) 서울대·도서벽지 학교(12교) 연계한 '섬너머학교' 운영('26. 下~)	'26.12월
2	거점국립대 집중 지원으로 인한 국·사립대학 소외 우려	2026	○(현황) 거점국립대 학부교육 혁신 및 공유대학 체계를 통해 지역 내 국·사립대 성장 지원 - 앵커·대학혁신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·사립대 지속 지원 ○(계획) 대학재정지원 예산 확충을 위해 재정 당국 협의(~'26.12.)	'26.12월
③ 민원 반복 제기사항				
1	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-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, 민원이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, 서류처리 등 교사 업무 과다	2026	○(현황) 「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」 발표(5.28.) ○(계획) 교사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, 보조인력 및 교육지원청 전담인력 확대 등 학교현장 지속 지원('26. 下)	계속
2	교복제도 개선을 통한 교복가격 안정화 - 과도한 교복 가격이 가계 부담으로 작용, 착용 빈도가 적은 정장형 교복 폐지	2026	○(현황) 편한 교복으로 전환 유도 등 '교복가격 개선방안' 발표(2월), 전국 중·고 교복가격 전수 조사(2.27.~4.30.)를 통해 가격 적정성 검토 및 품목별 가격 상한가 마련(5월) ○(계획) 학교 알리미에서 교복의 유형·단가 등 학교별 교복 현황 공시 강화(9월)	계속
④ 기 타 (감사원·시민단체 등 지적사항)				
1	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	2023	○(현황) 교원 겸직 실태조사 연 2회 실시('21~)/ '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' 배포('23.12.)/ '사교육 카르텔' 교육청 징계 이행 점검('25.2월~) ○(계획) 교원 겸직 관리 체계화·효율화를 위한 NEIS 관리 시스템 신설 및 현장실태점검('26.10.)	'26. 下
2	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정	2025	○(현황) 현장 전문가 중심 배정위원회 구성, 현장 점검단의 의대 교육여건 및 확충 계획 점검 결과를 의대배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원 배정 완료 - 의대 교육여건 개선방향 수립('26.3.) 및 추진 중('26.3.~) ○(계획) 정원 배정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등 이행상황 점검 및 지속 지원	'26.3월

II. 상반기 주요 성과

1 지역 진학·취업 지원 체계 구축 [국정과제 55-1, 55-2, 55-4]

- (지방대로의 **진학 가속화**) 지방대 경쟁률 11.6% 상승('25. 5.86 : 1 → '26. 6.54 : 1) 및 10년 만에 교육목적 서울 전입인구 감소(전년대비 3%, KOSIS)
 - 거점국립대 전략 투자 확대('25. 4,242억 원 → '26. 8,855억 원) 및 5극 3특 성장엔진 연계 '서울대 10개 만들기' 본격 추진
 - *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, AI 분야 패키지 지원(전년 대비 교당 1천억 원 증)
 - 시·도 중심 지역대학 지원체계를 5극 3특(초광역) 단위 학생·인재 중심으로 개편 → 성과기반 지원 정책 전환(前 RISE → 後 앵커)
 - 32개 의과대학(서울 제외)에 '27~'31학년도 정원 추가 배정('27학년도 490명, 이후 매년 613명), '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
 -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II) 비수도권 선발 확대('25. 917명 → '26. 1,950명)
- (지역**취업 촉진**)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(17,871명)의 71%(12,742명) 지역인재 채용
 - 조기취업형 계약학과(21개 中 비수도권 15개(1,351명)) 등 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
 - ※ 비수도권 첨단분야 부트캠프 취업 지원(채용 가점, 취업 장학금 등) : '25. 390건 → '26. 1,134건
 - 협약형 특성화고 확대('26. 36교(16교 증)),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IP(지식재산) 마이스터 선정(60팀) 등 산업인재 양성 강화
 - ※ ('25. 기준) 직업계고 졸업자 전체 취업률 약 55%, 그 중 학교 소재 지역 취업률 51.8%

2 AI 시대 교육 혁신 [국정과제 99-1~3]

- (**첨단·AI인재**양성 총력전) 모든 영재학교(8교)·과학고(20교)에 AI·SW 특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, 학·석·박 통합과정 도입(박사학위 5.5년 취득可)
 -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(18개 컨소시엄), AI·AX 부트캠프 50교(4,200명), 사내대학원('26.3. LG AI 대학원 개원, 석사25명, 박사5명) 등 기업 연계 인재 양성
 - 우수 아공 학부생(400명, 연2천만원) 및 AI 석·박사(BK21 21개 교육연구단(1,632명)) 지원

[3대 메가프로젝트(반도체, 피지컬 AI, AI 데이터센터) 관련 분야 인력양성 현황]

	전문학사	학사	석·박사	합 계
'25년 졸업자 수	22,158명	57,577명	13,911명	93,646명
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	900명	17,024명	5,140명	23,064명

※ '25년 졸업자와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중복 가능

- (전 국민 AI 일상화) 전 생애 AI 교육 청사진 마련(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방안('25.11.)) 및 정부의 AI 교육 의무 법제화(교육기본법 개정('26.5.))
 - **학생** 정규교과 및 방과후 AI 집중 교육*, **대학** AI 기본교육(20교) 및 재직자 등 교육 강화(AID 전환 중점 전문대 '26.35교), **성인** 온오프라인 AI 교육(13만명 수강)
 - * AI 중점학교 및 연구·선도학교 확대('25. 2,336교 → '26. 3,307교, 전체 초중고의 27.7%)

3 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로 학부모 부담 경감 [국정과제 101-1~3]

- (**유아 무상교육·보육** 본격화) '25.7월 5세 약 27.8만 명(1,289억 원), '26. 4~5세 약 50.3만 명(4,703억 원) 대상 무상교육보육 지원금 신속 확대
 - ⇒ 유치원·어린이집 학부모 양육비 부담 대폭 경감(전년대비 각 41.4%, 18.3% 감소), 월아 6.5만 명 증가 및 학부모 만족도 90점 이상 달성
- (**돌봄·교육** 강화) 돌봄·교육 참여 초등학생(1~6학년) 10.8만 명 증가*, 초3 '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' 도입(연 50만원)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
 - * 참여학생 수: '25.107만→'26.117.8만 / 참여율('25.→'26.): 초1·2 77%→83%, 초3 45%→63%
 - **영유아** 거점·연계형 돌봄('26. 220개(164개 증)) 및 **초등** 지역 초등돌봄·교육 협의체*('26. 208개(전체 92%, 94개 증))를 통해 야간·주말방학 돌봄 추가 지원
 - * 예) 학교-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'26년 신학기 초 틈새돌봄 지원(871교 참여)
- (**사교육비** 감축) 사교육비 총액(전년대비 1.7조 원) 및 참여율(전년대비 4.3%p) 감소, '사교육 경감 대책' 및 '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' 발표('26.4.)

< 주요 우수사례 : 영유아 사교육 대응 >

- ▶ '영유아사교육대책팀' 신설('25.9.), 학원 레벨테스트 집중점검 및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도입으로 영유아 불법 사교육 관리체계 구축 → '국가정상화 프로젝트'로 집중 관리

4 K-교육의 도약 및 위상 제고

- (한국어 **세계화**) 한국어반 운영국('26. 51개국(4개국 증)) 및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지원자('25. 56만명(7만명 증)) 확대, 11개국* 한국어 대입 반영('26.1.)
 - * 뉴질랜드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불가리아, 스리랑카, 우즈베크, 일본, 태국, 프랑스, 호주, 홍콩
 - 재외동포·해외학교 교재·교과서 보급('25. 91개국 94만권) 및 '한국형 고등교육 모형(교육과정-학사-학위 결합)' 국립대 최초 수출(경북대-베트남, 충남대-우즈베크)
- (**글로벌 경쟁력** 도약) '26. IMD 국가 교육경쟁력* 21위로 전년 대비 6위 상승
 - * **정량** GDP 대비 정부재원 총 교육비(36위→14위), **정성** 초·중등(49위→41위), 대학(58위→51위)

Ⅲ. 핵심 추진과제

1 지방 주도 성장 과제

대통령 말씀	❖ 5극3특 체제에 따른 지방 거점대 육성에 예산 집중 투자, 지방 청년들에게 교육 등 강화...수도권보다 더 많은 기회 필요.(’26.6.8.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)		
추진전략	❖ 지역 우대 교육 정책 추진으로 지역 우수인재 양성 기반 및 정주여건 구축		
핵심목표	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·연구투자 (전임교원 증원 병행 추진)	’26. 목표 서울대의 70%	⇒ ~’30년 목표 서울대의 90%

1 메가프로젝트 인재 양성 (국정과제 55-1~3)

- (성장엔진 전략 인재)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전략 인재거점화 산업부 협업
- (국가인재 중심축 확립) 기업·대학이 교육과정을 설계·운영하고 첨단·융복합 인재를 기르는 ‘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’ 육성(’26. 3교)
 - ※ 예) 서남권 : 반도체학과 신설 및 미래모빌리티 등 유관학과 확대, 고가 실험·실습 장비 대폭 확충, 학생 진로(취업/창업/진학 등) 맞춤형 프로그램 등
 - 권역별 성장엔진을 고려한 학생정원 증원*, 교원 확충, 규제혁신 등 총력 지원
 - * 대학이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‘지역협약정원 제도’ 및 ‘인재양성신속트랙제’ 신설
 - (혁신생태계 조성) 성장엔진 연구(응용융합)에 집중하는 융합연구원 육성,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및 기업·과기원·대학 등 공동 R&D로 초격차 기술 확보
 - 서울대-거점대 반도체 연구 협력 체계* 구축 및 공동 계약학과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 인재 공급
 - * 서울대(중앙HUB)-전남대(I 권역)-부산대(II 권역)-경북대(III 권역)-충남대(IV 권역)-전북대(V 권역)-강원대(V 권역)
- (지역거점형 인재) 5극3특 성장엔진과 메가 프로젝트 맞춤형으로 지역 고등교육 체계 대전환(’26. 2천억 원) → 기업 지방이전·투자 뒷받침
- 지방정부-기업-대학 간 인재양성 협력 체계 구축, 수준별 인력양성 본격 추진
 - ※ 예) 국립창원대-정부출연(연)-지역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→ 대학 내 대학-정부출연(연) 연합연구원 설립 및 LG HVAC 연구센터 유치 등 산학협력(현장실습, R&D) 플랫폼 역할 수행
- (전문기술인력) AI·반도체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*(’26.6교) 및 산업기사기사를 취득하는 ‘가칭’자격특화 특성화고 도입(’27. 20교) → 산업인재 집중 양성
- * 목포공업고(전남)-삼성SDS, 문경공업고(경북)-KT&네이버클라우드와 협약, ’28년 개교
- (재직자) 대학·전문대학을 재직자 친화적인 개방 체제로 전환(’27.~), 메가 프로젝트 등 지역산업 첨단화에 맞게 업스킬·리스킬 지원(마이크로디그리 등)

② 매력적인 지역 교육 기반 조성 (국정과제 55-5)

□ 기업·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 우수 교육기관 확충

- (교육여건 혁신) 지방정부-기업-교육청과 협력하여 최고 수준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, 운영 자율성을 갖춘 초·중·고 혁신모델 개발('26.下~)
- (안심 육아 지원) 젊은 부부의 정주를 위해 학생·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치원·어린이집 환경 조성 및 특색프로그램 등 집중지원(기관당 최대 1억원)
- (우수 학교 유치) 지역-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AI 중점 과학고 등 우수학교 신설 및 이전기관 자녀 선발 특례 마련(~'27.)

< 메가프로젝트 지원체계 운영(안) >

- ▶ (개요) 교육부 내 담당조직을 두고, 교육부-교육청-기업 관계자 협의체 운영
- ▶ (역할) 이전지역 교육여건 개선, 첨단분야 인력수요 분석, 인력양성 계획 지원
- ※ 이전기업, 지자체, 교육청 등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실시(2회, ~'26.7.)

□ 지역 주도의 유연한 학교 육성

- (새로운 교육 체계 확립)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('26. 40개)으로 필요한 교육특례('27.~) 적용 → 소규모학교 통합·연계 등 학교 혁신생태계 육성
 -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영아 유치원 입학 및 어·유·초 통합 운영('26.下~)
- (지역 생활 거점화) 돌봄·문화·체육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확대, 폐교활용 시 재정지원 신설(행안부 협업, 120억원)

③ 적극적인 지역 청년 우대 정책 (국정과제 55-4)

□ (지역 균형 장학금)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 장학금 대폭 확대 및 「지역인재장학금」 개편을 통한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 지원('26.8. 방안 마련)

□ (취업 역량 강화)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국립대 등 지역대학에 수도권 수준* 이상으로 확대, 지역인재 채용제도 강화(채용결과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)

* ('25.) 수도권 2,047명(24교, 평균 86명), 지방국립 373명(9교, 평균 41명), 지방사립 1,234명(21교, 평균 59명)

- 첨단분야 인턴십('26. 500명), 대학생 표준현장실습('26. 3.3만명(1천명 증)) 확대

□ (창업 지원) 창업학기제 및 창업학점제, 창업 휴학 등 창업 친화 학사 제도로 학생창업 활성화(학생 창업기업 : '25. 2,274개 → '30. 2,800개 목표)

- 창업기숙사 확충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* 등 부처협업 강화(과기정통부·중기부 협업)

* ('26년)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: 교육부-과기부-중기부 이어달리기 방식 지원
[교육부, 과기부] 실험실 지원(22개 대학, 약 163개) → [중기부] 사업화 자금 연계(약 30개사)

2 역점 과제

대통령 말씀	❖ 첨단인재 (‘26.4.16. 대수보회의), 기초·인문사회 투자 확대(‘26.2.5. 미래과학자와의 대화) ❖ AI 교육 (‘25.12.12. 교육부 업무보고), 민주시민, 문해교육 등 중요(‘26.4.28. 국무회의)		
추진전략	❖ 이공·첨단분야부터 기초학문 (인문사회, 기초과학)까지 다각적 인재양성 지원 ❖ 공교육 역할을 AI, 민주시민, 사회정서, 문해력 등 기본역량으로 확장		
핵심목표	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 인재양성 확대 (해당학과 졸업자 +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)	‘26년 약 11.6만 명	~‘30년 목표 약 20만 명

① 미래 인재강국 도약 (국정과제 99)

□ AI 등 이공·첨단 인재 양성 가속화

- (**핵심인재**) 영재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(20교)·영재학교(8교)에 AI 분야 대학기업 연계 ‘AI 심화연구반’ 신설(‘26.下~) → 대학 연구인력·시설 조기 활용
 - 고등교육법 개정(‘26.3.)으로 도입된 학·석·박사 통합과정 등 조기 학위취득 과정을 AI 거점대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확산(‘27.~)
 - 대학 보유 우수 연구시설·장비를 공동활용시설 중심으로 집적화하는 ‘공유·연계’ 연구생태계 확립 → 우수 인재 연구경험·기회 확대(‘27.~)
- (**실무인재**) 기업-대학이 함께 단기간에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부트 캠프(‘27. 방산바이오 등 120개),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확대(‘30. 반도체로봇 등 50개)
 - 실무 현장형 AI 인재양성을 위해 AID전환 중점 전문대학 확대(‘27.~)
 - 수도권-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과정·인프라 등 연계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추진(‘30. 에너지·항공·미래차 등 18개)

□ 기본이 튼튼한 연구·학문생태계 신속 조성

- 과제 중심 경쟁형 R&D 체계와 함께 대학 중심 자율연구체계(블록 편당) 신설 → 대학 R&D 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 **과기정통부 협업**

- ▶ **연구자** 우수 기초과학·인문사회 인재육성 및 연구몰입을 위해 석사·박사·교수 까지 개인 연구 지원경로를 최대 18년(기존 9년)까지 대폭 확대(‘27.~)
- ▶ **연구단** 5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개편(‘26.12.)을 통해 지역·기초학문 등에 대한 쉼 주기 연구지원 확대(기존 석·박사 중심 → 개선 학사-석·박사-박사후 등)
- ▶ **대학 본부** 과제 수주 경쟁 → 단기 성과 → 강자 독식 구조를 탈피하여 대학 자율의 연구 특성화 및 지원 대상·분야의 사각지대 해소

□ **K-교육 확산**을 통한 **글로벌 인재강국** 도약

- (**한국어교육** 확산) 한국어반 확대('26. 51개국 → '30. 70개국) 및 현지 軍 교육훈련기관(카자흐 유엔평화유지군센터, 중앙아 최초)에 한국어 강좌 개설('26.8.)
 - AI 기반 자동 출제·채점 시스템 등 AI·디지털 기반 TOPIK 개편으로 한국어시험 응시 규모 확대(지원자 수 '25. 56만 명 → '30. 100만 명)
 - 필요한 모든 국가에 한국어 교재·교과서 제공('26.下~), 현지 한국어 수업 및 교원 양성을 위한 청년 파견 확대('26. 93명 → '27. 1천명)
 - ※ 재외동포·해외학교 대상 한국어 교재·교과서 보급 확대('26. 98.4만권(3.6만권 增))
- (**고등교육** 수출) 현지 교육·학사관리-국내대학 학위수여를 결합한 '한국형 고등교육 모형' 수출 확대(~'30. 10교)
- (외국인 **유학생** 질 관리) 한국어능력기준 상향, 해외 학위 검증 체계 강화 등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통한 질적 내실화 추진('26.下)

② **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** (국정과제 100, 101)

[**생애초기 교육·돌봄 보장**]

- (**영유아**) 무상교육·보육 완성('26. 4~5세 → '27. 3~5세), 공공보육이용률 제고('25. 45.8% → '30. 55%↑)로 국가책임 확대, 일원화된 지원체계 구축(~'30)
 -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(~'28. 0~2세반), 정서·심리* 지원 확대
 - * 유아 정서·심리 검사, 부모 상담·교육, 교사 연수 지원('26.~)
 -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(2,075개소)에 유치원(특수학급) 수준으로 교재·교구 지원('27.~), 이주배경 영유아에 한국어·문화 교육('27. 300개소 → '30. 1,000개소)
 - ※ 발달지연·이주배경 등 특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('27.)
 - 교육청-지자체로 나뉘어있는 교육·보육 사무를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하여 유치원-어린이집 간 격차 없는 출발선 보장(법률 개정, ~'26.)
 - ※ 예 : 기관 격차 없는 급·간식 지원, 보육교사 처우개선, 취약 영유아 지원 등
- (**초등**) 학교-지역이 협력하는 **온동네 초등돌봄교육** 본격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**행안부·복지부 협업**,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확대('26. 초3→'27. 초3.4)
 - 방학 중 희망 학생에게 학교 돌봄·교육을 지속 확대*하고, 학교-지역 사회 협력 '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 우수모델**' 확산***
 - * ('26.여름방학) 97만 명 참여 → ('27.여름방학) 100만 명 이상 참여

- ** 우수사례 : 예산 소규모 학교의 거점형 통합 종일 돌봄, 영광 지역 기관 협업 특색 프로그램 지원 등
- *** ('26.夏) 11개 교육청(17개 시·군·구) → ('26.冬) 16개 교육청(30개 시·군·구) → ('27.~) 전국 확산

[모든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]

- (문해력)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·쓰기 영역을 문해력으로 확장('27.~), 기초학력 전문교원(~'30. 6천명)·협력강사* 확충으로 맞춤형 지도 활성화
 - * 협력수업, 분리지도 지원 학급수 : ('26.上) 32,094개 → ('27.) 51,000개 목표
- 독서 집중 학년(초3·4, 중1, 고1) 지정·운영('26.7.~) 및 교육부-교육청 독서교육 정책·사업 연계를 통해 전체 학교로 책 읽는 학교 문화 확대
- (AI 이해·활용역량) AI 중점·선도학교('26. 3,307교 → '27. 4천교)로 AI 수업 및 학생 체험* 확대, 교원을 위한 AI 수업자료 개발('26.下)과 연수 강화('26. 1만명)
 - * 방과후 디지털새싹 프로그램('26. 19.5만 명), STEAM 동아리('26. 1,532팀) 등
- 모든 대학생이 들을 수 있는 'AI 기본교육과정' 개발 확대('26. 20교 → ~'30. 전체 대학 50%), 최고의 교육콘텐츠를 확산하는 '대한민국 명강' 도입('27.)
- 지역·대학·온라인*을 통해 전 국민 대상 '기본 평생학습'으로 AI 활용 역량 교육 제공, 취약계층을 위한 AI 교육서비스('AI 온이음') 신설('26.下)
 - * K-MOOC(대학강좌 온라인 개방)의 AI 강좌 확대('25. 174개 → '26. 200개 → '27. 220개 목표)
- (민주시민 역량) 찾아가는 헌법교육 특강* 및 '학교민주시민교육법' 제정('26.下), 수업원칙 개발(헌법가치 준수, 다양한 관점 존중 등) 및 역사 체험 확대**
 - * 헌법 2,000개 학급(법무부), 교육청별 3회 내외 교원 연수(법제처) 등
 - ** 역사 캠프·체험활동('26. 250회 → '27. 300회), 역사 심화탐구동아리('26. 100개 → '27. 150개)
- 학생 자치·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혐오·차별 예방 문화 조성*('26.下), 관련 '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 자료' 개발·보급*(~'26.9.)
 - * 학교학생회 및 시도학생 자치 네트워크 활성화, 전국학생회 대표가 참여하는 '학생 참여 포럼' 운영
 - ** 혐오·차별 표현 예방을 주제로 프로젝트 및 토의·토론 수업이 가능한 범교과 교수·학습자료 보급
- 학생의 올바른 미디어 이해·판별·활용 역량을 위한 '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' 수립('26.下), 교원 연수(600명) 및 교사연구회(30팀) 운영
- (사회정서 역량) 예방-감지-개입-회복 등 4 단계에 걸친 안전망 구축 및 고위기 학생에 대한 즉각적 발견·개입 시스템 구축('26.下)
 -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 지속 확대('26. 보통교부금 0.25% → ~'30. 1% 목표)
 - 모든 초·중·고에 ①'30년까지 전문상담인력 100% 배치를 목표로 지원, ②'27년부터 '사회정서교육' 확대 운영(6차시→17차시)

3 개혁 과제

대통령 말씀	❖ 교육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을 반등 필요('25.11.13. 대수보회의)			
추진전략	❖ 잠재성장을 제고를 위한 미래교육 투자 확대 및 지방교육재정 비효율성 완화			
핵심목표	OECD 대비 고등교육투자	현재 OECD 대비 약 69%	⇒ '30년 목표 약 80%	⇒ '35년 목표 100% 달성

1 잠재성장을 제고를 위한 미래 교육 혁신 (국정과제 99-1~2, 99-4)

□ 미래인재 양성체계 구축

- (미래인재 투자 전략 마련) 영유아부터 고등·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걸친 미래인재 투자 전략 수립('26.下) **범부처 협업**
- **저출생극복** 무상교육보육 등 영유아 지원, **미래인재** AI·첨단인재양성·유치, AX 대전환, **지역균형** 성장엔진 연계, **청년도약** 취·창업, 정주지원 등 범부처 인재전략 마련
- (고등평생교육 혁신 방안 수립) 인구·기술·지역 대전환에 대응, 대학이 역할과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제·재정·규제 혁신('26.下)

< 고등평생 혁신 과제(예시안) >

- ▶ (사회적 논의 과제) 미래사회 대비 대학 기능 분화 및 다층적 학제 등 체제 혁신, 정원외 학생 모집 적정화 등 규제 혁신 과제 관련 사회적 논의 착수
- ▶ (메가프로젝트 지원) 국가균형성장전략 기반 지역 지정형 패키지 지원(인재, 인프라, R&D 등)
- ▶ (국립대학 재정 혁신) 통합재정 도입 및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효율성·책임성 제고
- ▶ (사립대학 구조개선) 「사립대학구조개선법」('26.8.~'35.12.)에 따라 (1단계, '26~'30) 특성화 지원 및 자발적 구조개선 촉진 → (2단계, '31~'35)한계대학 본격 해산·청산 추진

- (인재양성 협력 기반 구축) 국가인재기본법 제정('26.下), 국가인재위원회 (위원장 : 국무총리) 신설('27.)을 통한 국가인재 관리*·협력 체계 구축
- * 공공·민간·정부 DB를 활용한 국가 우수인재 지도 구축('27.~)
- 상시적 교육정책 협력·조정을 위해 '국가교육협의회'(교육부-국교위-교육청-대학) 및 '교육자치정책협의회*' (교육부-교육청) 구성·운영('26.下)
- * 안건 예시) 현장체험학습 확대, 교육활동 보호, 학생 스마트폰 사용, 학생 자치 활성화 등 교육공동체 협력과제

□ 교육기관 AI 대전환(AX)



- **(초·중등)** 학생·교사·학부모의 학습활동, 행정업무, 교육적 소통 지원
 - 교육특화형 AI 및 학습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('26.下~)하여, 既 운영 중인 특수목적 AI*, 시도교육청 AI 교수학습플랫폼**과 연계
 - * 기초학력, 서·논술형 평가, 대입·진로상담 / ** '26. 현재 14개 시도교육청 운영 중
- **(고등)** 학생 맞춤형 학습·진로 설계부터 교직원의 행정·연구 효율화까지 대학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AI 기반 지능형 캠퍼스 구축('27.~)
 - 데이터 표준화 및 고성능 인프라 환경 구축을 기반으로 표준 AI 솔루션 개발(교육, 행정, 연구 등) 및 전국 대학으로 오픈소스 공유·확산

②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및 학교 자율성 확대

□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화

- **(성과 중심 재정운용)** 핵심 국정과제 관련 시·도별 재정투자 규모 등 재정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, 차년도 교부금 산정 시 반영
- **(현금성 복지 정비)** 교육청의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 복지사업*('26. 2,733억) 대상 차등적 교부금 페널티 부과(상위 8개 교육청, 최대 100억/교육청)
 - * 학생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현금 지급되는 신입생 입학준비금, 교통비 지원 등

□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성 강화

- **(형식적인 일 줄이기)** 불필요한 규제·관행을 지속 발굴·개선('26.上 20건*) 하여 교원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활동 집중 지원
 - * 예) 납품내역서·출장비 등 과도한 지출증빙 개선, 학생·학부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온라인 처리 시스템 구축 등
- **(학교 자율성 확대)** 초·중·고 목적사업비* 감축('25. 50% → '30. 30%) 및 기본운영비·총액사업비 확대를 통해 학교 자율성·효율성 제고
 - * ('25.) 학교운영비(13조원) 중 50%(6.4조원) 차지, 학교당 평균 33개 목적사업 시행 중

4 국가정상화 과제

- (발굴) 누리집, 범부처 창구, 자체발굴 등을 통해 불법행위, 불합리한 관행·제도 등 교육분야 비정상 과제 총 102개 과제 접수('26.4.17.~7.16.)

구 분	학교·학생 (학교생활·안전·과목·시설)	교원 (업무경감·인사)	학부모 (교육·교습비)	특수교육 (정원·시설·재정)	영유아 (시설·교원)	기타 (자격·보조금 등)	합계
건수	17	16	2	60	4	3	102

- (현황) 교육 정상화 추진단 운영('26.4.27.~), 청년자문단·전문가 등과 정책 토론회('26.4.30.)를 통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총 8개 선정, 개선 추진

⇒ ① 학원 불법행위 제재, ②교복제도 개선, ③미인가시설 관리, ④영유아 사교육 대응, ⑤⑥어린이집 입소대기 완화·설치 유연화, ⑦보조금 부정수급 방지, ⑧급식업체 선정 강화

- (성과/계획) △교육비 부담 완화(교복·교습비), △불법 교육행위(미인가시설·유아사교육) 제재 및 △규제 합리화(어린이집 운영개선)로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

- (교육비 부담 완화) 교복가격 개선방안* 발표('26.2.), 전수조사 토대로 품목별 상한가 마련('26.5.), 학원비 편법인상** 집중점검('26.7.10., 61,038개 점검, 5,515건 적발)

* 정장형 폐지 유도 등 교복 간소화, 공급주체 다변화, 교복담합 대응 등

** 자율학습시간을 교습비로 징수, 기타경비(모의고사비·차량비 등) 초과징수 등

⇒ (계획) 학교별 교복 유형·단가 등 학교 알리기 공시 필수항목 확대(~'26.9.)

- (불법 교육시설 점검·관리) 미인가 국제학교 등 불법시설에 대한 전국 현장 점검(~'26.6., 254개소) 및 행·재정 조치*로 학생·학부모 보호 강화

* 초·중·고교육법 '형사처벌폐쇄명령' 법령해석 가이드라인 배포('26.4.),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('26.5.)

⇒ (계획) 미인가시설에 대한 실효적 제재강화를 위한 법률안 마련(~'26.12.)

- (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)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및 인지교습 제한 등 영유아기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는 건전한 환경 조성*

* 「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」 발표 및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조항 신설 등 학원법 개정('26.4.)

⇒ (계획) 영유아 사교육 인식개선(지속), 유아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('27.3.)

- (보육여건 개선) 신도시 등 영아 보육수요 집중 지역에 영아반 설치 확대,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합리화*로 보육수요 대응 유연화

*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확대와 의무 설치 기준(현 500세대) 개선 관련 현장의견 수렴 지속('26.4.~6.)

⇒ (계획) 국공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령 개정('26.下)

5 현안과제

①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(국정과제 102-2)

□ (**교육활동 보호**) 교육부·교육청 內 조직·기능 보강*, 지역 단위 교육 활동보호센터 확대('25. 55개 → '26. 89개) 및 역할 강화**

* 교육감 직속 별도조직 구성, 악성민원·아동학대 신고 등 대응 통합전담팀 구축 등

** 법률상담, 소송 대응, 심리상담·치료 등 지원

□ (**학교민원 대응**) 창구 단일화 및 민원대응팀 구축* 등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 현장 안착, 특이(악성)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처리

* (학교)민원대응팀, (관할청)학교민원대응지원팀 설치 법제화(개정법 시행, '26.10.29.)

→ 퇴거 요청, 일시적 출입제한 등 학교장 권한 강화(시행령 개정, ~'26.10.)

□ (**법적 안전망** 구축)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법·제도 개선

▶ 실질적 법·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(법무부·경찰청·복지부)와 협의

▶ 국회 법률 발의 현황 :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(복지위 계류),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(법사위 계류)

○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·중과실이 아니면 교원의 민·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(「학교안전법」 개정, ~'26.下)

② 수업·평가 혁신을 위한 평가 공정성·신뢰성 확보 국교위 협의

□ (**AI 평가** 도입) 서·논술형 평가 단계적 확대 및 내신평가 운영 지원을 위한 AI 평가 지원 시스템 도입*('26.~'29.)

* AI를 활용하여 서·논술형 평가 채점 및 평가문항, 출제 난이도 자가 점검 지원

※ 서·논술형 평가 AI 학습데이터(평가 문항, 채점 기준, 학생 답안, 채점 결과 등) 110만건 구축(~'29.)

□ (**공정성·전문성** 관리)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(학교- 시도- 국가 3단계) 개선,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인증제 도입*, 수능 출제·관리 안정화

* 평가 전문가 양성('26.~계속) → 인증제 시범 운영('27.~'28.) → 전면 도입('29.)

※ 내신, 수능 등 평가 공정성 관리 등을 위해 ^{가칭}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 추진('26.~'30.)